

세미나 취재

민정당은 지난 6월 2일 오후 2시 당사 통일관에서 농축산업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정책 개발 세미나」를 개최했다.

민정당 중앙위 농림축산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전동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최대의 위기적 상황에 이르렀으며,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대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개방화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농업·농민이 생존해 나갈 수 있고, 또 피부에 직접 닿는 대응발전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 아닐 수 없다」고 역설했다.

전 위원장은 또, 「4·8 농축산물 수입개방예시발표로 인해 우리의 농축산업은 전면 개방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더욱이 오는 6월 GATT 국제수지위원회에서 있을 농축산물 수입제한조치 철폐요구 등 국내여건은 어려움이 더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방현 민정당중앙위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70년 후반부터 밀어닥친 농축산물 수입개방화 추세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을 위한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업 생산을 수지 안맞는 산업으로 이르게 했다」고 밝히고, 「낙후 부문인 농어촌에 '92년까지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화한 경제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미국의 주장처럼 국제분업이나 비교생산비설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되면 우리 농업은 자본재적 대농경영으로 미국 등의 농업에 의하여 단기간에 잠식하게 된다」고 강조하면서, 「대응정책에 대한 각계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다」고 피력했다.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 단국대 김동희 교수는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농협대 서기원 교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대응정책」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동희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농가소득의 저위와 고부채 ▲농산물의 시장축소 ▲과소화 하는 농촌과 떨어지는 농민의 사기 등이 한국농업의 당면문제」라고 밝히고, 「향후 농정방향은



민정당, 농축산물 수입개방

— 배합사료 부가제

농업의 본질을 튼튼히 개조하고 공동화 되어가는 농촌 사회를 활력있는 국민적 생활공간으로 재건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서 「▲토지소유 집중과 토지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토지정책을 재정립하고 ▲농지기반의 대대적 정비, 건설한 영농주체의 육성과 경영규모 확대, 농민의 농업소득원 보호개발, 농산물 가격지지 및 안정 등을 통한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며 ▲식품가공업부의 농림수산부 이관, 농업구조개선 사업에 농민의 참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개발의 주체적 역할을 담당케 하고 국가기관은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을 맡도록 하는 농업행정 개혁 등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기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정부의 4·8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의 예시계획과 보완대책상에는 ▲사전대책 미흡 ▲보완대책 미비한 품목의 과다 ▲간접피해 보상대책 소홀 ▲관세기능 활용 미흡 ▲보완대책의 법적 근거 및 구체성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해 식품을 생산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되고 비경제적내지 공익적 기능의 비중도 크다는 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



대응정책 개발 세미나 개최

영세울 적용 마땅—

취재 : 곽삼섭 기자

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특히, 「수입개방에 대한 향후 대응책으로 ▲개방예시계획이 농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분석 ▲차액보상, 생산조정 보상, 작목전환 용자, 국산주정원료 구매 등 보완대책 미비 품목의 추가보완 ▲간접피해 예상품목에 대한 가격지지정책 강구 ▲가격지지원관리기금의 확대 ▲가격예시제도의 정착 ▲출하손실 보상제도의 도입 ▲농축산물 수입 관리위원회의 설치 ▲관세제도의 탄력적 운용 ▲비관세 장벽의 다각적 활용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울 적용 ▲유망 수출 농축산물 지원확대」등 11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가 끝난 후 정부, 학계, 연구소,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정당 정책부실장인 서상목 의원의 좌장으로 박상우(농림수산부 농정국장), 장상환(경상대 농대 교수), 황민영(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국장), 이우재(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노영한(한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 간사), 박태식(서울대 농대 교수), 이근형(재무부 세제국장), 이기호(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 등 8명이 참석, 열띤 종합토론을 벌였다.

이날 종합토론에서 농축산업관계자들이 4·8 수입개

방 조치로 인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궁금해 하던중 박상우 농정국장은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을 함께 세워 약 16조원을 농어촌에 지원키로 하고 농지문제를 농어촌공사에서, 농산물 가격지지는 가격안정대와 농안기금·자조금제 등으로, 농촌문화 환경은 정주권개발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국장은 또, 「4·8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는 돼지설육이나 신설딸기 등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은 포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품목이 수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등의 견해를 밝히자, 일부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여 정부는 믿을 수 없으니 수입개방 및 농촌문제는 민정당 차원에서 해결토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자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일변하기도 했다.

또한, 황민영 국장은 「농업문제는 경제적으로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농업만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고 했으며, 노영한 간사는 「최근 수입 쇠고기로 인해 돼지 사육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정부는 수입 쇠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광고까지 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향후 정책방향이 의심스럽다면, 선진국과 같이 사료에 대한 관세도 없애고 부가가치세 영세울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의 토론내용이 정부의 정책문제로 제기되자 이근형 세제국장은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울 적용은 시행에 문제점이 많아 어렵다면, 배합사료 영세울 적용에 따른 세금감수는 1천5백억원 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만큼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기호 정책조정국장은 「농정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수출일변도로 인해 오늘날 농업문제가 야기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면서, 이제는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큰 흐름에 이의가 있을 수 없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